

#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공식 출범

공공운수노조 | 승인 2025.08.14 13:41

## “위험의 외주화 끝장내자”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이하 김충현 협의체)가 13일 오후 2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 광역본부에서 공식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협의체 위원과 자문위원, 정부 관계자, 고 김충현 노동자의 유족, 노동·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되풀이하지 않는 마지막 협의체”가 될 것을 다짐했다.

김선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끝내는 마지막 협의체가 되길 바란다”며 “노동문제는 단순히 비용이나 생산요소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6년 구의역 사고 조사단, 2019년 김용균 특조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민·관 공동기구임을 언급하며, “김용균 사망 이후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수많은 하청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김충현 사망 이후에도 불과 한 달 만에 또 다른 하청노동자가 숨졌다”며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촉구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 “노동문제를 예산이나 산업정책의 시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의 생명은 사회 전체와 맞먹는 가치”라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생명·안전 권리 준수를 강조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발언에서 “용균이 사망 이후 정부가 대책을 약속했지만, 올해 또 김충현이 죽었다. 사고 현장에서 선명한 핏자국을 보며 절망했다”며 “부모로서 이런 트라우마는 평생 해결할 방법이 없다. 공공기관에서만만큼은 이런 억울한 죽음이 다시는 없도록 협의체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현장 노동자들은 위험하고 힘든 일을 자부심 하나로 버텼지만, 이제는 ‘다음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 더는 참지 않기로 결의했다”며 “협의체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사람 목숨을 살리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위원(15명)

구분	성명	주요 경력	비고
위원장	 김선수	· 現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 前 대법원 대법관('18.8~'24.8)	
정부 (4명)	 이창길	· 現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前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유병희	· 現 기획재정부 공공혁신심의관 · 前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	
	 최연우	· 現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 前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배영일	· 現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 前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	산재예방감독 정책관 직무대리
현장 노동자 (4명)	 이태성	· 現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 지부장 · 前 故 김용균 특조위 자문위원	
	 공성식	· 現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 · 前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이보아	· 現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 前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김영훈	· 現 한전KPS 비정규직회 지회장 · 現 태안화력발전소 현장노동자	
전문가 (6명)	 박두용	· 現 한성대 기계전자공학부 교수 · 前 안전공단 이사장('17~'21)	
	 이상희	· 現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 現 한국노동법학회장	
	 채준호	· 現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 · 前 공공부문 정규직화 중앙컨설팅단 위원	
	 전주희	· 現 서교인문사회연구소 연구원 · 前 故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	
	 이정필	· 現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 前 국회 에너지특위 자문위원('19~'20)	
	 박다예	· 現 법률사무소 고른 대표변호사 · 前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 자문위원(12명)

구분	성명	주요 경력	비고
정부 추천 (6명)	 배계완	· 現 을지대 안전공학과 외래교수 · 前 안전공단 기술이사('18~'21)	
	 전주용	· 現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산업일자리전환팀) · 前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흥준	· 現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 前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상현	· 現 동양대 스마트안전시스템학부 교수 · 前 노동부 전문위원	
	 조역진	· 現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연구위원 · 現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위원	
	 길은선	· 現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現 노동부 산업전환고용안전위 전문위원	
대책위 추천 (6명)	 조성애	· 現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국장 · 前 故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	
	 남우근	· 現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前 故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	
	 한재각	· 現 공공재생에너지연대 활동가 · 現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김태욱	· 現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 現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민변노동위원회	
	 조건희	· 現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조유상	· 現 한전KPS 비정규직지회 사무장 · 現 태안화력발전소 현장노동자	

이번 협의체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발전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 점검·개선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가 목적이다. 위원장 1명과 간사위원 2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고용노동부에 협의체 지원단이 설치돼 운영을 돕는다. 협의체는 발전소 폐쇄 시 총고용 보장, 김용균 특조위 권고 이행점검, 사망사고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등 의제를 논의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협의체 출범까지는 두 달여간의 준비과정을 거쳤다. 6월 12일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정부와의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고, 6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가 유족을 만나 약속했다. 이후 관계부처 회의, 다섯 차례의 준비회의, 국무총리 훈령(안) 논의 등을 거쳐 이날 공식 출범에 이르렀다.

참석자들은 “이번 협의체가 보여주기식 기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발전소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협의체는 향후 운영 세칙을 마련하고, 의제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